

고하 송진우와 ‘혁명세력들’의 문제

이주영 (건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건국의 주역이 될 두 세력

2014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새로 사용되기 시작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역사적 인물인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에 대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2개 교과서에서는 송진우란 단어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5개 교과서에서는 1번씩만 나타났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만은 놀랍게도 3번 언급했다. 그것은 다른 교과서들과는 달리 고하의 평생 동지인 김성수(金性洙) 전 부통령의 사진과 함께 별도의 ‘박스’에서 같이 다루어질 정도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우파 교과서라고 공격을 받아 전국의 2,450개 고등학교 가운데서 부산의 부성고 한 학교에서만 채택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 사실로만 보더라도, 한국현대사의 거목인 송진우와 그가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역사에서 거의 완전히 잊혀지고 지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역사적 업적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지 못한 역사 서술이다. 역사학은 원래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시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과 현상을 기록해야만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의 최대 역사적 과업은 건국(建國)이었다.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한 역사 서술은 건국 활동과 관련된 인물과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누가 건국세력이 될 자격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방 당시에 고하(古下) 자신이 분명하게 회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대답은 1945년 9월 8일 중화민국의 대공보(大公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는데, 지금 보면 마치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역사 서술의 지침을 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 기자가, “한국인들은 오랜 기간의 식민지 생활로 자치 경험이 부족하니 일정 기간 신탁통치 같은 강대국들의 후견 아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한 고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에게는 비록 식민지 교육이긴 하지

만 전문학교 이상의 대학교육(大學教育)을 받은 국내 인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혁명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두 세력의 협력으로 국가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다”고.

실제로, 이 두 세력이야 말로 당시의 최대 과업인 건국(建國) 사업을 담당할 주역들이었고, 따라서 역사 교과서에서 일차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나라 없던 시대의 ‘민족사회’

두 세력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한 ‘혁명세력’은 해방 당시 한국사회의 영웅들이었다. 일제에 대항해 독립을 찾아 새 세상을 만든다는 혁명(革命)의 명분은 다른 모든 명분을 압도하는 최고의 가치였다. 그 때문에 고하는 중경 임시정부 세력이 건국운동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임시정부봉대론(臨時政府奉戴論)을 내세웠던 것이다.

건국을 담당할 두번째 세력은 일제시대에 식민지 교육을 받은 국내의 엘리트층이었다. 일제시대에 해외에서 소수의 혁명세력들이 투쟁하고 있는 동안, 한반도 안에서는 한민족의 대부분인 2천3백만이 살고 있었다. 숫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그 시대 역사의 주류(主流)였다.

그들은 나라가 없는 피압박민족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통치자들이 시키는 대로 세금을 내고, 군대에 나가고, 창씨개명을 해야 했던 식민지 백성들이었다. 소수의 적극적인 부일(附日) 반역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다수는 일본인 지배자들에 대해 저항의식과 함께 독립의지를 가진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그들 때문에 일본인 지배자들과는 구분되는 한국인의 ‘민족사회(民族社會)’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회는 다른 사회들처럼 그 나름대로의 엘리트층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러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 고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사회’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고하는 민족불멸론(民族不滅論)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에 연달아 나타났던 국가들, 즉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은 권력을 쥔 세력에 의한 정치적 변화일 뿐이었다. 그 밑바닥에는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오는 ‘민족사회’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국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민족사회’는 남으며 그 것이 지속되는 한, 언젠가는 민족국가가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절망의 시기에도 고하가 독립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역사관 때문이었다.

이것은 왜 고하가 것처럼 온 힘을 쏟아 <동아일보>를 유지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신문이야 말로 나라없는 시대에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갈 민족문화(民族文化)의 보존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하는 <동아일보>를 일제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의 옥고와 온갖 수모를 달게 받았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국내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인 고하는 300명 동아일보 사원의

월급을 항상 걱정해야 하는 경영인(經營人)의 짐까지 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이중적(二重的) 고충을 이해한 해외 혁명가가 미국의 이승만이였다. 1925년 여름 고하가 범태평양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하와이에 갔을 때, 이승만은 인촌 김성수의 안부를 물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는 국내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고하에게 하와이에 남으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고하는 자기는 국내에서 따로 할 일이 있다는 말로 사양했다.

고하와 이승만 두 민족주의자는 해외에 있는 국내에 있는 민족운동가들이 모두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려 했던 것이다.

일제시대에 한국인의 '민족사회'가 유지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때 양성된 엘리트층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국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 교과서는 이와 같은 일제시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민족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간 고하 같은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업적을 중요하게 서술 했어야 했다.

국제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건국의 길

지금 돌이켜 보면, 해방 당시 건국의 문제는 주로 연합국이 주도하는 국제관계(國際關係)에 달려 있었다. 우리의 해방이 주로는 연합국,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패망으로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한반도의 운명은 연합국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감각을 가진 민족주의자인 고하는 연합군(聯合軍)이 한반도에 들어온 다음에 그들과 협의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국민의 총의를 모은 다음 건국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가하든가 정당창당위원회를 만들기 보다는 우선 연합군환영위원회와 국민대회준비회를 서둘러 결성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사회는 한 번에 새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혁명사상으로 뒤덮이는 '혁명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고하가 1920년대 초 혁명으로 들끓던 중국과 멕시코를 우려하면서 언급했던 바로 그 '혁명병(革命病)'이 우리 사회에 서도 도지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해방이 되자 제일 먼저 표면에 나타난 '혁명세력'은 국내 공산주의자들이였다. 그들은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소수의 경우처럼 지하에 숨었거나 다수의 경우처럼 전향해 친일활동을 하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이였다. 일제시대에 그들은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민립대학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이 일본의 통치와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일제시대 '민족사회'의 발전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그런데도 해방이 되어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그들은 혁명세력으로 나타나 권력을 잡으려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이조각에 불과한 '조선인민공화국'이었고 당

사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만든 ‘벽보 내각’이었다.

좌익들이 서둘러 움직였기 때문에 고하도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서둘러 한민당(韓民黨)을 창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시대의 ‘민족사회’ 안에서 성장한 엘리트층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한민당은 당연히 나타나야 할 역사적 산물이었다. 한민당의 출현은 인간의 역사가 과거와의 급작스러운 단절(斷絶)이 아니라 지속(持續)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한민당은 원칙적으로 친일협약이 있는 인사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일부의 비난과는 달리 친일적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농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의 가능성을 정강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일부의 비난과는 달리 반동적이지도 않았다. 단지 그것은 앞 시대의 연장(延長)이고 역사의 연속(連續)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엘리트만으로는 건국(建國) 과업의 수행이 쉽지 않았다. 해외 독립투쟁의 명분(名分)을 가진 혁명세력의 참여가 필요했다. 오랫동안 주자학의 명분론에 젖어 온 한국인들에게 그러한 명분은 특히 중요했다. 그래서 고하는 ‘임시정부 봉대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고하는 건국에 필요한 단합을 위해서라면 좌익들과도 협력하려 했다. 그래서 여운형에게는 ‘인민공화국’의 선포를 취소해 건국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박헌영에게는 지인을 통해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역사는 단절이 아닌 지속의 과정

그러나 ‘혁명 병’에 걸렸던 당시의 한반도에서는 건국(建國)과 사회혁명(社會革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좌·우의 혁명세력들 모두가 독립혁명과 사회혁명(공산혁명)의 목표가 혼합되어 있던 일제시대 혁명운동의 관성(慣性)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 사회혁명이 이루어지자, 수많은 반공 인사들이 남쪽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동아일보>는 월남민들에게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건물 3층을 제공했다. 그 곳을 연락 장소로 하여 조선민주당, 그리고 나중에 서북청년회로 통합된 반공청년 단체들이 건국운동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

좌·우의 혁명세력들이 날뛰는 상황에서 고하 자신도 그들 일부의 흥탄에 쓰러졌다. 하지 중장은 고하 장례식에서의 조사(弔辭)에서 그의 암살로 한국인들은 독립을 오랫동안 늦추는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의 예언대로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하의 역사관은 인간의 무한한 진보(進步)를 믿는 자유주의 사관이었고, 그것은 “노력 전진 또 일보(一步)”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1932년 신년사설 속에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진보는 과거와 단절하는 혁명(革命)을 통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개혁(改革)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였다.

바로 그것이 정상인(正常人)의 역사관이였다. 그와 같은 역사관을 지녔기 때문에 고하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흔히 사회주의 풍조에 빠져 ‘주의자(主義者)’인체 하며 가식적인 삶을 살던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혁명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소용돌이의 시대를 살아 왔다. 그 과정에서 분단과 6·25전쟁의 참화도 겪었다. 그러한 민족적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들(혁명가들) 때문에 더욱 더 지옥이 되어 가고 있다”는 월터 립프만의 말이 무엇인지도 실감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 밑바닥에는 무엇을 실현하자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혁명의 사상이 깊게 깔려 있다. 북한에서도 어린 통치자 김정은이 2014년 신년사에서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혁명 과업의 완수를 외치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 상당수가 혁명의 환상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국민을 역사의 정상적(正常的)인 궤도로 이끌고 갈 인물이다.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상(像)을 고하(古下)에게서 본다. 그것은, 모두 혁명사상으로 들떠 있던 해방정국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대중에 영합하지 않고, 삶의 현실과 냉혹한 국제관계를 살피면서 민족의 살 길을 냉정하게 찾아 가던 한 정상적인 사회지도자의 모습인 것이다.

이주영 :

1942년 평북 용천에서 출생.

인천중·제물포고 졸업.

서울대, 서강대, 하와이대 사학과에서 수학.

역사학회 회장 역임.

현재 건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